
2016평화·통일활동가워크숍 정세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오후 2시 30분-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시민평화포럼
후원 평화3000,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프로그램

2:30-3:30 발표

사회: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발제1: 한반도 정세 전망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2: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전망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제3: 변화하는 북한 / 이주성 월드비전 대북사업팀장

3:30-4:00 Q&A 및 토론

목차

발제1: 한반도 정세 전망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3p.

발제3: 변화하는 북한 (이주성 월드비전 대북사업팀장) / 13p.

발제1

한반도 정세 전망

트럼프 이후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글로벌 정책 전망

○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루즈벨트(민)-아이젠하워(공)에 의해 확립된 미국의 초당적 국제주의 전통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전후 미국적 글로벌 질서의 한 축을 지탱해 온 초당적(bi-partisanship) 루즈벨티안 국제주의에 대한 동의가 약화되고 있음
- 미국적 질서에 기반한, 글로벌한 상호의존관계를 축으로 하는 Pax Americana 재건에 대한 회의감 증대
- 공화당의 근본 보수(radical conservatism) 진영이 보이는 태도는 1952년 당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후보가 당내 투쟁을 통해 확립한 초당적 외교전통과는 다른 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탈냉전 후 대통령, 상, 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한 00-06년 기간 공화당은 유지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하는 등 매우 당파적 정책을 강행한 전례가 있음
- 미국의 루즈벨트적 국제주의 즉 자유주의적 중도주의는 경제 개방과 세계화에 대한 강조, 인권에 대한 헌신, 비핵, 군비통제에 대한 국제주의적 접근,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질서와 제도 추구, 그리고 이를 위한 이를 위한 중도 좌우파 연합이라 볼 수 있음

○ 향후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신-고립주의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성급한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를 포함해 공화당 전체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게 만들었다는 공세를 취해 왔다는 점에서 고립주의로 흐를 가능성은 높지 않음
- 201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집중 공격하여 민주당 참패를 이끌어 내었음(오바마가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게 만들었다고 공격)
- 부시 시절에도 고립주의가 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이 제기된 적이 있음
-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들에서 나타난 내전이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과 긴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후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결과이기도 함
- 오바마에 비해 국제 규범과 질서 보다는 미국의 힘과 이익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대결에 민감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일 것임
- 미국 외교의 실패가 애국적 희생정신이나 미국적 용기 그리고 장기적, 전략적 비전 없이 탈냉전식 국제 규범에 과잉 경도되어 온 워싱턴 외교 로비스트들의 탓이라는 비판이 이미 제기되어 왔음(Walter Mead,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Foreign Affairs)

오바마 외교 노선과 트럼프의 비판

- 오바마 독트린은 '제재와 동맹'으로 요약 가능
 - 부시 독트린의 일방주의 /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 유지 동맹 등의 개념을 비판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 우선론을 강조
 - 실용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인 DDSS(Don't Do Stupid Shit)로 상징
 - 오바마 독트린은 외교 독트린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혼종성(hybridity)을 띠고 있으나 그 본질은 다자주의 지향성, 뒤에서 이끌기(leading from behind), 진보적 실용주의 등의 여러 측면으로 요약되기도 함
 - 2014년 웨스트포인트 연설을 독트린으로 불렀으나 오바마 스스로 '독트린'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
- 오바마 외교의 본질은 다자적 레짐 + 군사 공작(covert action) + 지상군 반대(no Boots on the ground) + 제재의 혼종으로 특징 지워짐

○ 오바마 행정부 8년간 미국은 나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듯하지만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미국의 글로벌 자산은 거듭 축소되었다는 자성이 증대

- 브렉시트나 터키 사태 등은 미국의 정책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조짐으로 해석됨

- 국민국가의 주권이 제약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과잉이 존재하는 역설의 결과이기도 함

- 동아시아에서는 힐러리-오바마 팀이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재균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 주권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동시에 개별 국가의 전횡이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현상에서 미국도 무관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임

- 주권 국가는 다자체의 강화나 재난 구호의 국제성, 다자 프로젝트의 등장 등으로 주권성이 약화되고 왔고, 이에 대한 개별 주권 국가들의 주권성 행사의 수준이 주목 대상이었음

- 민주주의의 후퇴는 지구적 현상(L. Diamond)이고 이는 시민 사회 세력의 약화나 분열과 연결되어 있음

- 이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연대를 통해 대안적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해지고 있음

- 단순히 글로벌 연대나 다국간 협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개별 국가에 대한 시민적 통제력을 제도적으로 회복하는 장치의 고안이 필요

- 어쨌든 개별 국가 주권 약화를 동반하는 지구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고수한 국제 규범 증시와 다자적 레짐론은 피해자가 되었음

○ 자유주의적 중도주의에 대한 반대를 특징으로 하는 듯한 트럼프즘은 외교 노선으로는 국제 규범에 따른 다자주의 정책보다는 강대국 현실정치를 선호할 듯

- 선거 과정 중에 나타난 트럼프 레토릭은 본토주의적 파퓰리즘, 전면적 제재 완화, 국제 협력과 다자 레짐에 대한 본성적 거부, 반정부적 자유지상주의와 연대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근본주의적 레토릭, 이데올로기적 경직성, 타협에 대한 적대성 등을 특징으로 함

- 구체적 공약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용론, 보호무역주의, 파리기후협약 무력화, 반이민, 이슬람 혐오, 인권·다양성·소수자 무시, 부자 감세 등으로 나타났었음

- 강대국 정치는 사실상 세력권, 영향권의 분할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ISIS와 시리아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에서 추론할 수 있는 그의 중동 정책은 러시아와의 세력권 협력으로 전망됨

• 의회 임기 조정 등 국내 정치 아젠다의 우선 순위가 높다는 점에서, 외교 정책은 강대국간 영향권 조정 방식을 저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구 동맹에 대한 재평가, 개입 정책에 대한 회의, 푸틴과 같은 권위주의 인물에 대한 긍정 평가 등이 새판짜기의 한 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부 논자는 트럼프즘의 등장을 Neo-liberalism 시대가 Neo-nationalism 시대로 전환되는 지구적 현상의 일환이라고 분석

- 트럼프의 ‘America First,’ ‘America great again’이나 힐러리의 ‘stronger together’나 본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의 지향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 트럼프는 방법적으로 규범과 도덕 그리고 구성주의로 설명되는 정치적 정론 (political correctness)보다는 힘의 시대, 이익의 시대를 제시

- 향후 곳곳에서 좌우 국가주의의 출현을 볼 것이라는 의미임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신국가주의 시대로(M. Blyth)

○ 신자유주의와 반 인플레이션 정책

- 반 인플레이션과 채권자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
- 완전 고용보다는 실업을 통한 노동 통제 그리고 생산의 세계화(임금 비용 고정)을 통한 반 인플레이션 정책이 중심
- 중간층 중심의 유권자 분호의 중봉화 그리고 중도 좌우 연합 정부 시대로 상징
 - 의회는 실질적 역할보다는 토크 바이자 샤우팅 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전략

○ 현재 지구적 현상의 본질은 디플레이션 시절 과잉 형성된 지불 불능의 채무자와 유권자 파워가 결합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현상의 전염 과정임

- 임금 상승률이 낮아 채무 상환 불능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경제 패턴이 굳어진 결과 인플레이션 불가 시대로 돌입
- 유권자 분포가 좌우 양봉 시대로 나타나면서 프랑스(국민전선), 스웨덴, 헝가리의 우파나 스페인(포데모사), 그리스(시리자), 스코틀랜드의 좌파가 전면에 부상하나 본질에서는 동일한 현상
- 이들의 좌우 극단주의는 반 채권 및 채무자 친화성, 복지 정책 지지, 반세계화, 친국가주의, 반 금융 자본적(반 월가)이라는 공통성을 지닌 유권자의 출현을 선점함으로써 부상함
 - 트럼프의 지지층으로 불리는 앵그리 화이트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음

자료: M. Blyth, 2016, "Why Trump's Victory Was 30 Years in the Making and Why It Won't Stop Here?" *Foreign Affairs*

2. 동아시아

○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중관계는 협조관계보다는 경쟁적 갈등관계에 대한 미래 그림자를 드리워 왔음

- 미중관계는 정냉경열(政冷經熱)관계의 틀을 깨고 긴장이 고조되어 왔음
-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 문제가 대외 관계에 여러 가지 고비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미국의 대중 전문가 다수는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으로 선회 중이었음
- 미중관계에 대해 낙관적 전망에 익숙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탈냉전기 이후 미중관계가 긴장 상태로 전환한 채 정책 결정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 전개에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음

○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안보 보장(strategic reassurance)과 중국과의 재균형화(rebalancing) 사이에서 미국의 대응이 정교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음

- 동아시아에서 다자적 아키텍처를 장기적으로 만들어 온 힐러리 국무장관 이래의 지금까지 재균형화 정책은 미-일 동맹 위주의 대아시아 정책이었음
- 중국과 러시아의 준동맹화 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없는 상태이고 미일 동맹을 확대 재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음
-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헤징 전략을 고민하는 상황이었으나 필리핀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독자 행보를 무기화하기 시작

○ 물론 중국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서 중국 정치 세력 간의 파벌갈등과 이를 둘러싼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투쟁은 중국 경제의 하강 추세와 결합되어 더욱 경직된 대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파벌 투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에 대한 권력투쟁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전망

- 중국 경제의 미래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은 중국몽과 일대일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은 더욱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견됨
- 중국 역시 나름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18기 6차 중전회의의 ‘핵심’ 개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부상과 이에 따른 패권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 때문에 동요하고 있음

- 주변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막강하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비공식적으로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92공식 천명을 거부하는 대만 신정부나 사드를 배치한 한국 정부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명시적이기보다는 매우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형식의 비공식 압박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임

○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에 대한 조정적 경제 정책에서 출발할 것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신형대국관계가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관세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은 정면 대응과 보복을 다짐하고 있지만 의외로 타협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상존
 - 중국은 선제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하여 오바마 레임덕을 활용하는 인상
 - 미-중간의 경제 갈등은 2018-2019 기간 고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
 - 반 IS와 반 테러 정책이 2017년의 주요 정책이 될 것임
- 트럼프 시대에는 동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욱 중요한 세력균형자 (balancer)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편이 앞 당겨질 가능성이 있음
 - 중-일 관계를 구조적 갈등 관계로 인식하는 일본 역시 스스로 미일 동맹을 축으로 러시아를 끌어내서 중국에 대한 봉쇄를 강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보다는 러시아에 더 많은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도 상존
 - 이 경우 러시아가 미-중간의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음
 -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본과의 북방 4개성 협상에서도 쿠릴 열도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아베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음

2016년 공화당 외교안보전문가들의 반트럼프 성명과 트럼프 인사 전망

- 공화당 외교안보전문가들 122명과 50명은 각각 3월과 8월에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
 - 동 성명은 국무부 출신의 Cohen이 공식화한 것이지만 사실상 동 성명은 콘디 라이스 등 부시 행정부 시절 안보 전문가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음(라이스 장관은 직접 서명하지는 않음)
- 이들은 트럼프 인사들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 관계로 새 정부에 입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아시아 전문가로는 마이클 그린 등이 올라 있어서, 동아태 관련 정책 지위에 CSIS 출신들이 중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부시 행정부 시절 네오콘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현재까지 인사를 보면 안보 정책의 반-오바마주의적 성향은 분명하나 국무부 인선은 대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다소 유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공화당 컨벤션에 안보 연설로 얼굴을 비치고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M. Flynn은 민주당 당적자로 힐러리를 "Lock her up" 하라고 연설해 주목받았고 오바마-힐러리식의 반시리아 정책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
 -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임명된 Stephen Bannon은 "turn on the hate"를 강조하는 대안 우파의 일부로 새판짜기의 한 축이 될 것임
 - M. Pence 부통령 역시 티 파티의 입장을 대변하며 외교 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것으로 전망
 - B. Klingner 등 해리티지 인사들의 등용이 점쳐지고 있음(해리티지 DeMint 소장이 티파티 NC 상원의원 출신)
 - 주 UN 미국 대사 임명자인 니키 헤일리는 공화당 주류의 여성 스타 주지사(NC)는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임명한 것으로 평가
 - 2016년 오바마 국정연설 비판자로 등장하여 주목받은 인도계 미국인으로 반트럼프진영의 정치인
 - 2000년대에 볼튼, 사만사 등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가 화두가 된 시대에 대북 정책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져 왔음
 - 국무장관 임명자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향배를 알 수 없음

3. 북핵 문제와 한반도

○ 오바마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비합리성(irrationality)를 강조해 왔으나, 북한 정권은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이를 활용해 왔음(rational irrationality: NYT, 2016/09/11)

- 북한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핵무기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경제 살라미 전술로 이득을 확보해 왔다는 의미임
- 어쨌든 트럼프 시대에 오바마-힐러리 식의 북핵 정책과 전략적 인내 노선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방향을 짐작하기 어려움
 -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미국 내의 솔직한 입장임(M. Noland)
 - 내년 상반기 인선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듯
- 트럼프의 대북 정책 레토릭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됨
 - 햄버거 협상론이나 미치광이론이나 다양한 언술보다는 향후 정책 리뷰 과정을 주목해야 함

○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공세적 정책 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안 요인을 가속화

-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남북관계 키워드는 “비평화적 방법,” “고도의 격동태세,” “전민항전준비,” “통일대전” 등으로 매우 공격적 용어로 점철
- 군사연습 축소와 평화협정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저강도 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당분간 북한 역시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이번 외무성 비망록에서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조만간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2014.01.16. 조선국방위원회, 남조선당국에 중대제안 전달

“당면하여 남조선당국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미명하에 2월말부터 강행하려는《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부터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것처럼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조선반도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멀리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벌려놓으라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 CFR의 보고서는 동결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그 본질은 북한과의 협상보다는 중국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 하스와 트럼프의 관계 때문에 본 보고서에 주목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은 여전히 미-중 관계에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임
- 기본적으로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북한의 regime change에 주된 관심이 있고 대북 정책의 주요 옵션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됨
- 중국이 이같은 미국의 입지를 활용하면서 북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조율하는 게임을 오랫동안 해 온 관행에 따라, 2017년에도 역시 이같은 게임 상황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말레이시아와 제네바의 북미 1.5 트랙 혹은 2 트랙 회의는 트럼프 측 의중이 반영된 협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바마 행정부가 간접적이거나 상황 관리용으로 활용한 회담으로 보는 것이 적절
-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말레이시아 협상에 대해 긍정성을 부여하는 움직임이었음
- 제네바 회담은 특히 SAIS 팀들의 회담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듯

○ 구조적 위기 변수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인지 부조화 추세는 심화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적극적 전환이 절박한 시점임

- 한국 경제의 침체나 한국 외교의 한계 추세는 상수화 되고 있으나, 한국민 스스로 이를 인지하는 데 한계를 노정
- 90년대 이후 구조화되고 패턴화된 대중, 대북 인식 등 고정화된 정세 인식 틀이 현실 변화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데 실패
- 위기 경보는 많이 있으나 인지 능력이 패턴화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사로잡혀 있어 사실 분석에 근거한 경고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이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적 합의 수준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임
- 특히 FTA,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 한국은 트럼프 시기 취약국가 2위에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 대비가 필요
- 미국의 6대 통상 재협상 대상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함(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등 6개국에서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이 발생한다고 지적)

○ 북핵 문제도 소모적 숙적 관계 인식 틀을 벗어나 대북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신정책을 유도, 조율해 나가야 함

- 트럼프 시대는 강대국 정치가 중심이 될 것이므로 Korea-Passing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새로운 플랫폼에 남북이 협력 게임을 통해 덩치를 불려나가지 않는 한 한반도는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임
 - 협력 게임을 위해서는 제재 위주의 대북 정책은 한계임을 명심하고 동결 협상을 입구로 하는 대북 정책을 구체화할 때가 되었음

- 국가주의 현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아젠다 셋팅보다는 사회 역량의 강화를 준비해야 함
 - 사회 협약적 대북 정책에 대한 모색이 급박함

발제2

변화하는 북한

이주성 월드비전 대북사업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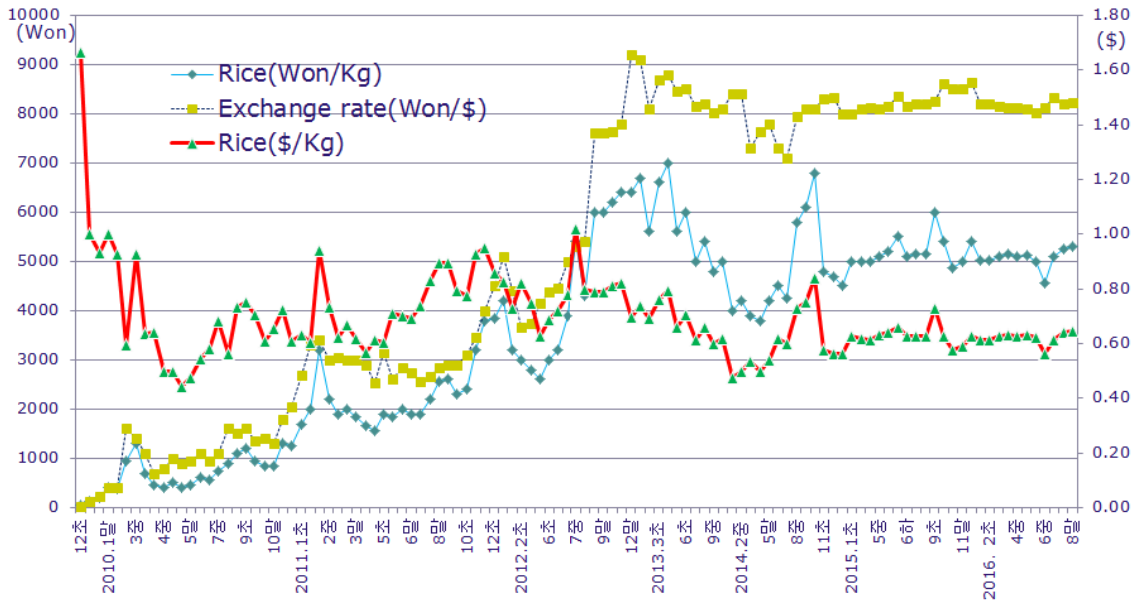
북한이 지난 5월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 개최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며 3대 세습의 완성을 선포했고 6월 최고인민위원회의 제13기 제4차를 개최하여 당과 국가의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김정은을 새로운 권력기구의 수반으로 추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과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군정치에 기반을 둔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꾼 것은 군사우선의 과도적 위기관리체계에서 정상국가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김정일의 선군시대에 핵을 보유함으로 군사강국을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경제강국을 이루기 위해 당-국가체계 복원을 위한 국가기구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3대 세습으로 공고화된 유일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단기간의 후계구축기간, 어린 나이 등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이루는 것이 중대한 과제로 남았다.

〈 북한의 주요지표 변동 추이(2010년 ~2016년) 〉



시장화와 주민생활의 개선

○ 북한 경제 전반에서 시장화가 빠르게 확산

- 식량 등 일부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비재는 시장을 통해 거래 (전국적으로 383곳 정도의 공설시장 + 더 많은 수의 비공식시장)
- 최종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시장화의 확대는 유통, 운송 등 관련 서비스의 발달 촉진 (대량유통가능, 일물일가, 가격안정화, 식량문제완화)
-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내수시장의 확대

○ 식품가공 등 일부 소비재, 중국 제품과의 경쟁 가능성 확보

○ 핸드폰, 태블릿 PC, 태양광 전지판 등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 소위 ‘6.28 조치’, ‘5.30 조치’ 그리고 ‘우리식경제관리제도’ 후 ‘사회주의책임관리제’ 등으로 불리는 경제관리체제의 개혁을 시도

대북협력사업의 변화

- 5.24조치 이후 현재까지 인도적 대북협력사업은 정치군사적 경색국면에서 안보우선 논리에 밀려 이명박 정부 때 간헐적으로 추진했던 긴급구호로 밀가루를 지원했던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그나마도 어렵게 됨
-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대북지원을 평화통일을 이루기까지의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그에 걸맞는 정책 추진 원칙, 정책 목표, 정책 수단과 추진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제정 노력 (2016년 11월 25일, 공청회)
- 북한 당국도 인도적 목적의 대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단체들이 강력 요청해야 함
- 최근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들에게 인도적 지원사업에 성과를 디딤돌 삼아 개발협력으로의 사업 전환 및 확대를 요청함. 북한은 경제적 측면에서 과거보다 굉장히 나아졌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남북민간협력의 사업 형태가 경제협력의 초석이 되는 개발협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 과학기술공유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음
-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전 가구의 무려 80%가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실조상태임. 또한 기초보건분야에서도 지표상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건강 서비스의 제공, 특히 필수 의약품과 기본 장비의 제공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임
- 향후 민간은 기존에 협력해 오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북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역량을 개발해 가도록 동시적으로 지식공유사업,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변화는 만남을 전제함. 북한의 변화는 끝없는 만남을 통해 견인해 가야 하며 북한의 변화보다 우리는 과연 변하고 있는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음